

2006년도

축산정책 추진계획(육계관련)

농림부

I. 축산정책 추진 상황 및 여건

1. 추진상황

- UR협상에서 축산물은 타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로 개방
 - 돼지고기, 닭고기는 1997년에 각각 33.4%, 30.5%, 쇠고기는 2001년에 41.4%의 관세로 수입 자유화
 - 다만, 일부 유제품은 2004년까지 시장접근물량(MMA)을 허용하고 고율관세 유지(탈지·전지분유 176%, 버터 89%) → 생산성 향상, 품질 고급화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
- 1994. 6 「농어촌발전종합대책」 이후 축산농가의 전업화, 유통개선, 품질고급화 등을 중점 추진
 - 생산시설의 규모화·현대화 지원 및 가축공제 사업 도입(1997)
 - 축산물종합처리장(LPC) 건설 등 도축장·가공장의 위생·안전성 수준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

- 가축개량사업 본격화, 축산물 등급판정제 도입(1993),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
- 최근 품질 고급화, 안전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축산 및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
 -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
 -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

2. 축산업의 변화된 모습

- 상당 폭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생산기반을 유지
 - 자급률(1995→2004) : 쇠고기 51.3% → 44.2, 돼지고기 94.5% → 84.9, 닭고기 97.9% → 90
 - 2004년 축산업생산액(10조8,399억원)이 농림업생산액(37조2,886억원) 중 29%를 차지하고 쌀생산액(9조5,564억원)을 추월
- 한우, 양돈, 양계 등 주요 축종의 규모화·전업

〈표 1〉 축종별 전업농 현황(1995 → 2004)

축종	전업농 농가수(비중)		전업농 사육규모(비중)	
	1995	2004	1995	2004
한육우	2,458호(0.5%)	5,483(2.9)	206천두(8%)	551(33.1)
젖소	1,325호(5.6%)	4,501(46.8)	98천두(17.7%)	344(69.2)
돼지	1,113호(2.4%)	2,868(21.6)	2,360천두(36.5%)	6,706(75.3)
산란계	357호(12.5%)	496(24.3)	23,515천수(50.8%)	33,692(65.5)
육계	306호(12.0%)	807(50.2)	12,518천수(37.8%)	40,174(80.2)

※ 전업농 : 한우·젖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 3만수 이상

- 화가 빠르게 진행
- 축산전업농 사육비중은 1995년 42.3%에서 2005년 73.4%로 증가
- 축산농가의 성장에 따라 의무자조금 조성 시작(2004 양돈, 2005 한우)
-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진전(양극화 심화)
 - 쇠고기 1등급/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 : (1995)12.8/6.3% → (2005)47.9/37.1
 -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중(2003→2005년) : 한우 17.4 → 29.5%, 돼지 41.4 → 47.7%
 - 2004년 10월 한우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 적용 실시
- 축산물의 안전성은 1998년 이후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를 농림부가 일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비자들의 평가
 -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 도입 등 위생·안전성 제고 기반 확충 - HACCP을 도축장(1998), 가공장(2000), 사료공장(2005) 등에 적용
 - 그 결과, 축산물안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
 - 식육중 일반세균수 : (1997)105-6/cm² → (2004)102-3/cm²으로 100배 개선
 - 미생물검사 위반율 : (1997)3.4% → (2004)0.47으로 7배 개선
- 축산업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완화 노력 경주
 - 2004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도입 및 2005년 축산업등록 완료
 -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을 마련(2004.9)
 -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(2005.12)
 - 2004년 경종과 축산간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

형 농업 확산을 위해 「자연순환농업팀」을 발족, 운영 중

- 구제역 등 전 세계에 만연한 악성 가축질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
 - 구제역은 2000년, 2002년 발생 이후 청정국 지위 유지
 - 2003년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3개월만에 종식한 이후 인근 국가와는 달리 현재까지 미발생
 - 예방접종으로 뉴캐슬병, 돼지콜레라 등 발생률 감소

3. 축산정책 여건

- 전업화, 규모화 등이 진전되고 개방화 체제에 상당히 적응했다는 점은 강점
 - 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추세,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출 증대 등은 축산업 발전의 기회 요인
 - 1인당 육류 소비량 : (1990)19.9kg → (2004)31.3 → (2013년 P)39.2
- 시장개방 확대, 특정지역 가축 집단 사육, 가축질병 지속 발생 및 수급 불안 반복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
 - DDA,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
 - 특히, 캐나다·미국 등 축산 선진국과 FTA 체결은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
 - 2003.12월 광우병(BSE) 발생 이후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 국내 한우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
 -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·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축

산업 발전이 불가능

-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
- 동남아, 중국 등 방역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 가축질병 유입 우려
- 수급불안에 생산자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미흡

II. 2006년 주요 추진계획

1. 축산물 고급화 및 유통개선

1) 축산물브랜드 육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우수 브랜드경영체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·축협, 영농 조합법인 등을 중점 육성
- 2004~2005년에 총 49개 경영체(한우 29, 돼지 20)에 브랜드경영자금, 브랜드컨설팅,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을 지원
-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
- 인증브랜드 : 2004년 18개(한우 8, 돼지 10), 2005년 25개(한우 13, 돼지 12)
- 그러나 시장에서 인정받는 축산물브랜드는 아직 소수
- 대부분의 브랜드가 품질 균일성, 규모화 등 요건에 미달
- 소비자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으나, 아직 낮은 실정임.
 - 인 지 도 조 사 결 과 : (2004)18% → (2005)20.8%(한국갤럽조사)

나. 2006년 추진계획

- 2004~2005년간 49개 브랜드경영체 선정에 이어 2006년 30여개를 추가 선정, 총 80여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(2013년까지 사육두수 중 한우 50%, 돼지 70% 점유 목표)
-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
- 한우, 돼지에서 육우, 육계까지 인증대상에 포함
- HACCP 수준이 높은 도축장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
-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개최(9월)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
- 브랜드경영체간 또는 지역간 통합으로 광역브랜드 조성 유도
- 순한한우(전남), 하이록(강원), 한우람(경기) 등과 같은 광역브랜드가 확산되도록 유도
- 광역브랜드사업체의 회계와 조직 등이 회원법 인과는 구분되도록 유도하고, 브랜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우선 지원

2. 축산물 안전성 확보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2004.7월 「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대책」을 수립,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축산물 관리체계의 기본 틀 마련
- 사육단계 :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항목(123종) 및 사료내 유해물질(78종) 기준 설정,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수 감축(53종 → 25종)
- 도축·가공단계 :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확대
 - 2003.7.1부터 소·돼지·닭 도축장(162개소)에 HACCP 의무 적용
 - ※ HACCP 적용이후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

105-6 에서 102-3 수준으로 개선

- 가공장은 자율적용 : 2005. 12월 현재 264개소가 HACCP 운용
- 유통단계 : 냉장 유통체계 정착 및 수거검사 실시
- 수입축산물가공품 위생검사 실시(전체 수입건 수의 16% : 연간 2,000건)
-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
-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과다 사용, 휴약기간 미준수 등 사례
- 2004년의 경우 120천건 조사에서 위반 290건 발생(위반율 0.25%)
- ※ 잔류위반율 : (미국)0.73%, (영국)0.24%, (일본)0.05%, (호주)0.21%
- HACCP 적용으로 도축장·가공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었으나, 보관·운반·판매단계의 위생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
-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

나. 2006년 추진계획

- 사육단계 : 농가 교육 및 사료·동물약품 관리 강화
-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사육단계에 HACCP 적용 점진적 확대
- 농가의 동물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
- 상반기(5월) 및 하반기(10월)에 5개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
-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, 감수성 약제사용 등 홍보물 배포
- 생산자단체, 동물약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'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(78명)' 운영 활성화(분기별 1회 모임)
-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- 위반농가 명단 공개, 규제검사 기간 연장, 과태료(100만원) 부과 철저
-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(2005.11.8) 및 운영
- 사료공장 HACCP적용 확대 : (2005년) 24개소 → (2006년) 40개소
- 사료내 중금속, 살모넬라균,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
-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우선 지원, 연간 사료검사 면제, 시설 개·보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- 도축·가공단계 : 미생물 등 검사 강화 및 HACCP 적용 확대
- 도축장 HACCP 운용 내실화 추진
-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실제 운용 여부 등 점검
- 시·도별 자체 점검 또는 시·도간 교차 점검(6월)
- 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(2006.5~11월간 평가, 12월중 발표)
- 평가 후 등급을 부여, 정책자금 차등 지원(상위권 금리 0%, 중위권 3%,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, 2006예산 637억원)
- 축산물 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
- HACCP지정 가공장 : (2005년)264개소 → (2006년)300개소
- 군납, 집단급식 등에 HACCP제품 우선 사용 협조 요청(연 2회)

- HACCP적용 가공장에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(2006예산 : 500억원)
- 정부 미지정 축산물가공장 HACCP 명칭 사용금지 제도 단속 강화
-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
 -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(10천건 → 13천건), 대상물질 확대(80종 → 83종)
 - 오리, 양(산양포함) 전문 도축장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 추가
 - 광우병 대책과 연계, 도축검사 내실화를 위해 도축검사관, 검사보조원 배치(130명) 및 교육 강화
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
 - 계란, 오리알의 미생물·잔류물질·부패·변질란 검사(2006년 : 1,710건)
- 유통단계 : HACCP 도입 및 위생감시 강화
 - 판매장 HACCP적용 모델 개발·보급 및 지정 확대
 - 식육판매장 유형별 적용모델 개발(연구용역 중) 및 보급
 - 리후렛 등을 통한 홍보 및 HACCP 운용 준비업체 컨설팅 지원
 - HACCP 지정 확대 : (2005년)2개소 → (2006년)8개소
 - 보관·운반단계 HACCP적용을 위한 지침 제정(11월말) 및 보급
 - 외국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제정(연구용역)
 - 지침 제정 내용의 HACCP 적용 업체 교육 실시
 -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(수거검사 물량을 상향 조정)
 - 닭·오리고기 지육·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

- 1일 도계수수 8만수 이상은 2007년부터, 8만수 미만은 2008년부터 시행
- 연말까지 표시기준, 포장단위·방법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업체 교육·홍보 등 현장 사전준비 시행
-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
 - 관계부처와 협조, 내년 1월 시행(영업장 면적 300㎡ 이상 규모)에 차질 없도록 입법 추진
 - 2006년에는 농협·생산자단체와 협의,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자율 적용 확산 추진
- 사육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전 단계 HACCP 도입에 따른 관리기구 설립 추진(가칭 사단법인 한국축산물HACCP기준원)

3.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

1) 친환경축산직불제 확대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
- 친환경축산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추가 비용 또는 소득감소분의 50%를 직불금으로 지급
 - 실적 : (2004)512호, 2,937백만원 → (2005)653호, 4,382백만원
- 축사 및 사료포 여건이 나은 농가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, 축사주변 악취·해충, 연말 예산편중집행 문제 등 개선 필요

나. 2006년 추진계획

- 200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3년차 시범사업(900호)을 성공적으로 마무리(58억원)

-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과 연계하여 사료용 총체보리·호맥 파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
- 축사주변 악취·해충 방제를 위해 환경개선제 구입비용의 50%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포함 지원(농가당 100만원 한도)
 - 조경수 식재 인센티브 지원한도를 축소(중전 200만원 → 100)
- 연말에 1회 지급하던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상·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참여농가의 경영개선 유도
- 2007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
- 2004~2005 기간중 시범사업실적을 정밀 분석(6월까지)
- 실시지역·축종 확대 및 사업단가·이행요건 마련(10월까지)

4. 선진 방역체계 구축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국가간 인적·물적 교류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
- AI는 태국 등에서 발생(2003말/2004초)한 후, 2005년 러시아·몽골(7~8월), 터키·루마니아(10월), 우크라이나(12월) 등으로 확산
 - ※ 조류인플루엔자(2003.12~2004.3 발생)는 2004년 이후 국내에서 미발생
-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평시 방역 활동을 강화
- 매주 수요일 “전국 일제 소독의 날” 운영 및 취약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(3,880개) 운영
-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한 초동 대응 체계 강화

- ※ 표준행동요령(SOP)을 보급, 조기 신고체계, 방역대 설정, 이동제한 등 조치
- 방역 시스템 미흡, 농가의식 부족 등 효율적 방역 추진 애로
- 질병 발생 위험도·유입경로 파악 시스템 및 대책 미흡
- 지자체장의 민선 전환 후 축산(가축방역)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및 투자 미온적(축산과 폐지 및 전문인력 축소)
- 신종 인수공통전염병(에볼라 등)에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 등
- 국내 고질적인 상재 질병인 소부루세라병, 돼지 만성소모성질병, 닭뉴캐슬병 등은 만성적으로 농가 피해를 초래

나. 2006년 추진계획

-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 가축질병 국내 유입 차단
- 중국·몽골·동남아 등 악성 가축질병 상재국 운항노선 집중관리
 - 검역관 증원 배치(56 → 81명), 검역탐지견 집중 배치(19마리)
 - 전국 공항·항만(33개소)에 신발소독 카페트(400개) 설치 등
 - ※ 주요질병 발생국 및 국제기구와 세미나·정보교환 등을 통한 공조체계 유지
- 가축질병 예방,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방역활동 강화
- 주요 질병 추적조사·색출, 지자체와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
 - 전국 농가 대상 혈청검사·병성감정 확대(2005년 1,400 → 2006년 1,450천건)
 - 종돈장 청정화를 통한 질병 최소화(검사항목 확대: 3 → 5종)
 - 우선 종계장·종돈장부터 질병 비발생지역

의 등급제 적용

- 살처분보상금의 지방비 부담(약 30%) 및 일부 사무의 지자체 이양

- 폐사축 랜더링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(4개소, 6억원)

■가축전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○ 질병 재분류, 지자체 역할강화 등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

○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(상반기)

○ 2007년 5월 공익수의사 현장 배치, 2006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

- 검역원 42명, 2개과 증설(국경검역 21명, 축산물위생 13, 동물보호 8)

○ AI 등 발생시 “가축질병위기대응메뉴얼(2005.9 NSC 마련)”에 따라 관련부처와 합동 대처

■주요 질병별 방역대책

① 돼지만성소모성질병(4P) 종합대책 수립·추진

②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마련(2006.2 월중)

③ 돼지콜레라는 100% 예방접종에 치중하면서 내년에 청정화 계획 수립, 닭뉴캐슬병은 발생을 줄여 농가피해 최소화 목표

- 뉴캐슬병 발생가능 역학조사 철저,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
④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(11월~2월간 특별 방역 추진)

○ 집중관리대상지역(21개소)의 닭·오리 임상관찰(1일 2회) 강화

※ 검사 : 오리(20천건), 철새(2.4천건), 민통선 야생조류(100마리, 분변 500점)

⑤ 구제역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

5. 한·미 FTA 대책

가. 현황

■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2006.2.3 한·미 FTA 공식 출범을 선언(제1차 협상은 5월초에 개최될 전망)

○ 타국과 FTA 체결 사례를 감안할 때, 미국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전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

□ 축산물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FTA 체결 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

○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 이전까지 미국산 쇠고기(관세 40%) 수입 비중 : 75%(국내 소비자들이 타국산보다 선호)

○ 돼지고기(관세 25%), 닭고기(관세 20%) 수입 비중 : 각각 22.6%, 27%(2005.11월, 금액기준)

○ 치즈, 유장분말, 조제분유 등 유제품의 경우 미국산은 품질 및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관세 철폐시 영향이 클 전망

※ 농촌경제연구원(KREI)의 영향 추정(관세 50% 감축시~관세 철폐시)

- 수입량 증가 : 낙농제품 157~527%, 육류 등 91~215%

- 생산액 감소(연간) : 낙농제품 142~1,110억원, 육류 등 3,380~9,031억원

■한·미 FTA를 앞두고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

나. 2006년 추진계획

■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은 협상시 양허제외, 관세 일부 인하, 저율관세 수입쿼터 설정,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

※ 미국은 2004년 호주와 FTA 체결시 쇠고기,

- 낙농제품 등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
-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, KREI, 관련 단체, 전문가 등으로 T/F팀을 구성(2006.2월)하여 운영
- 한·칠레 FTA 피해대책 수립 경험을 토대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방안, 피해 구제 방안, 소요되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등 중점 검토
 - 연말까지 진행될 농업·농촌종합대책 보완 작업에 반영
- 영향 분석 및 양허안 작성, 국내대책 수립 시에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
-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
 - ※ 축산신문 주최 한·미, 한·캐나다간 FTA 대응방향 워크숍 개최(2.10)
- 협상개시 후에는 협상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양허안 작성 등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

6. 축산물 수출확대 추진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2005년도 돼지·닭·오리고기, 종축 등 축산물 수출액은 4천 5백만\$로 전년(3천 1백만\$) 대비 46.7% 증가
- 돼지고기는 2000년 구제역, 2004년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검출로 인해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
- 닭고기는 국내가격이 높아 노계 날개육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, 삼계탕·오리고기는 홍콩·일본지역 수출이 증가 추세
 - 닭고기 : (2003)1,837천\$ →(2004)390 →

(2005)2,296

- 삼계탕 : (2003)1,924천\$ →(2004)1,946 → (2005)3,520
- 오리육 : (2003)1,988천\$ →(2004)1,137 → (2005)3,682
-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종돈은 작년에 베트남·필리핀에 수출 재개(863두, 1,326천\$)
- 돈육(가열가공품)·닭고기(신선육)의 경우 대일 수출이 열려 있으나, 실적이 미흡한 실정
- 주요 축산물 수출국들과의 FTA체결에 대비, 중·장기적으로 돼지고기·닭고기 신선육의 수출 재개·확대 필요

나. 2006년 추진계획

- 축산물 수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
- 관련 기관·단체·업체간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애로를 발굴, 해결하고 정보 교류(1.17, 1차 협의회 개최)
- 수출 물류비 지원을 지속하면서 중·장기적 수출 생산기반 구축 유도
- 축산부문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: (2005)362백만원 →(2006)400
- 신선 닭고기 수출을 위한 사육·가공·유통·소비구조 구축 유도
 - 규모화된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2.5kg 증체 출하 및 부분육시장 발전 방안 마련
- 해외 식품박람회 등을 통한 수출가능 축산물 홍보 강화
-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(Foodex Japan, 3.14~17)에 삼계탕 및 오리고기 특별 홍보 추진
 - 한국산 가금육 판촉을 위한 홍보세미나 개최(3.15, 동경)
 - 현지 대형 유통체인·한식당을 이용한 삼계탕 판촉·홍보 행사 등

- 해외(일본·대만·홍콩)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, 국내 시찰과 육가공 기술정보 교환(9월)
- 오사카식품박람회(Foodex Kansai)에 우리나라 돈육, 계육 및 가열가공품을 전시하여 판촉·홍보(10월) 등
- 미국측의 한국산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조속 마무리 추진
-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, 교포수가 일본보다 2배이상 많아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
7. 축산물 수급안정 추진(양계)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닭고기·계란은 생산주기가 짧고 연중 가격진폭이 큰 반면, 단기 생산조절로 수급안정 도모가 용이하다는 잇점도 존재
 - ※ 육계산지가격(2005년) : 최고 2,018원/kg, 최저 755
 - ※ 계란산지가격(2005년) : 최고 1,356원/10개, 최저 766
- 종계 등 강제 환우(換羽)로 병아리 품질저하 및 공급과잉 초래

- 육용종계의 입식물량이 많아 금년도 육계가격 불안 예상
 - 육용종계 입식물량 : (2004)4,387천수 → (2005)5,067

나.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

- 양계자조금 활성화로 생산자 자율수급 기능강화
- 육계 의무자조금 조성(4월)을 위해 대의원회 투표(2월)를 통해 의무납부 여부 및 거출액 결정
- 산란계는 임의자조금(일정규모 이상 농가 대상) 조성 방안 마련
- 종계 데이터베이스(D/B) 활용 및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자율 생산조절 여건 조성
- 종계 D/B(2005.6부터 자료입력) 및 농가에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
 - 부화장 입란·발생 실적과 산란실용계 분양 농가까지 자료 축적
- 농가별 D/B와 연계하여 강제환우 근절 지도·교육
-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(2006년 68억원) 추진
- 소비홍보, 수출촉진, 종계 D/B 및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고 필요시 종계도태 등 생산조절(긴급상황에서 지원 최소화) 

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일을 위해서
 죽을 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. ”

-니히지마 미노루